



이슈 ▶3면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

기획 ▶5면

‘지상파 재송신’ 갑론을박을 질다

오피니언 ▶7면

[칼럼] 통합방송법과 OTT 서비스

미래부, 재난망 주파수 ‘알박기’ 강행

11월 14일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700MHz 20MHz 폭 확정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1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안대로 700MHz 주파수 중 20MHz 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난망에 분배된 주파수는 718~728MHz와 773~783MHz로 총 20MHz 폭이다. 재난망 주파수가 결정됨에 따라 재난망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난망 구축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700MHz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88MHz 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5년 상반기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재난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시한 뒤 미래부에게는 분배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700MHz 잔여 대역을 놓고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래부의 원안대로 재난망 주파수 배치가 이뤄지면서 700MHz 주파수 효율이 떨어져 방송과 통신의 상생 방안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KBS 관계자는 “미래부의 계획대로 재난망 주파수를 배치하게 되면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과 방송용, 통신용으로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과 통신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선 700MHz 대역에서 9개 채널, 기존 대역에서 2개 채널 등 총 11개의 채널을 확보해야만 한다. 즉 700MHz 대역에서 54MHz 폭(채널당 6MHz 폭 필요)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파 장애로 인한 일정 구간을 감안한다면 700MHz 나머지 잔여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안한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3면>

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신 편향적인 주파수 정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앞으로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와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모바일 공개토론폰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11일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도 원안을 포함한 4가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을 내놓으며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채 되지 않아 미래부의 이러한 태도들이 단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을 원안 그대로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주파수심의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월 13일 ‘국민 공공복리 외면

하고, 국회 우롱하는 주파수 분배 시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 공청회가 끝나기 무섭게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양질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힌 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래부가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모바일 공개토론폰을 백지화하고 700MHz 주파수 정책을 처음부터 논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는 모바일 공개토론폰을 백지화하고 700MHz 주파수 정책을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미래부 예산에 700MHz 주파수 경매 세입을 포함시켜 들기가 하면 공청회 직후 일방적으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상정하는 등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1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는 미래부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며 “미래부의 방안대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둘러싼 논의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아닌 국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700MHz 정책협의체 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선평 baek@kobeta.com

방통위, 재송신 협상에 개입한다고?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얼마 전 새벽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그동안 시장에만 맡겨 두었던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법제화해 차별 없는 이용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 사례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업체 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또 다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월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송신 분점 조정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직권 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등 재송신 분점 조정 방안을 담은 것으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업체 간 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조정하고, 블랙아웃 발생 시 방송 재개를 강제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들은 수년간 이상적 합의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송신 협약을 맺어왔다”며 “방통위가 갑자기 ‘프로그램 공급·송출·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해 사

업자간 협상에 개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지적이다. 방송협회는 이어 “방통위는 협상 결렬에 따른 방송 중단 등 파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간의 협상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협상과 로비의 대상은 관련 부처 정책결정권자와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S 관계자 역시 “그동안 유료 방송사와 어렵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정부가 재송신을 강제하게 되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고 CPS 지불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 방송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MBC 지역 사장협의회는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재송신료는 고품질의 지상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자원 중의 하나다. 특히, 다매체 중앙 집중적 방송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자원 부족 상황에 처한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경영의 지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재정제도는 지역을 고사시키는 ‘암덩어리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11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방송사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합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KBS 등 공적 재원으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선 CPS 협상을 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맡겨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14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통해 CPS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CPS 협상은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간 브라질월드컵 중계 협상에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통해 무리한 개입을 시도했던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도치 않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가능성을 배제하며 지상파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물이해를 노출시켜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업계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지난번 사례를 겨울삼야 방송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반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백선평 baek@kobeta.com

알립니다

〈KOBETA 콘퍼런스〉

미래 미디어 세상을 만나다

11월 19일 KBS 아트홀 ... 미래 미디어 생태계 변화 집중 논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1월 19일 (수) KBS 아트홀에서 ‘기술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KOBETA 콘퍼런스(이하 KOC) 2014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 통신 등 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KOC 2014에서는 인문·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 미디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나아가 미래 미디어 시대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기술과 전략,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맞는 뉴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콘퍼런스 프로그램

시간	세션	강사
09:30 - 10:00	사전 등록 명단 확인 및 현장 등록	
10:00 - 10:05	인사말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10:05 - 10:10	축사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0:10 - 11:00	키노트 미래학자가 본 방송의 미래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전문미래학자)
KOC1. 기술, 세상과 소통하다		
11:00 - 11:40	모바일 인터넷 발전 통합과 전망 (방송 시장 중심으로)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현 다음카카오 사외이사)
11:40 - 12:20	미디어로 진화하는 브랜드들	김명진 FRUM CEO
12:20 - 13:30 점심식사		
13:30 - 14:10	사물인터넷과 인터넷의 미래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KOC2. 미디어, 희망을 마주하다		
14:10 - 14:50	지속 가능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	정준희 중앙대 교수
14:50 - 15:30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시장, 경쟁, 시청자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경제학 박사)
15:30 - 15:50 Break Time		
15:50 - 16:10 아카펠라 그룹 원더풀 공연		
KOC3. 사람, 미래를 만든다		
16:10 - 16:50	창의적 혁신, 그 오해와 이해 그리고 진화	김동준 이노캐탈리스트 대표
16:50 - 17:30	메모와 생각 정리 기술	이상혁 로이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17:30 - 17:40	경품 추첨 및 마무리	

- 일 시 2014년 11월 19일 (수) 9:30~17:30
- 장 소 KBS 아트홀(구 라디오공개홀)
-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주 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 등 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obeta.com)를 통한 온라인 등록
- 참가비 무료
- 문 의 전화 02-3219-5635~5641

초대합니다

201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지난 1년 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매년 격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방송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4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 후 삼 드림

2014. 12. 11(목) 18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 3층 라벤더룸

지상파 UHD 경제적 가치, 약 11조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경제적 가치가 약 11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11월 3일 ‘지상파 UHD 방송의 경제적 가치’ 중간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방송 관련 산업 분야에서 4조 4천억 원, 방송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 3조 6천억 원 UHD 이용자 가치 최소 1천 1백억 원에서 최대 1천 6백억 원, UHD 콘텐츠 파급 효과 즉 한류 콘텐츠의 수출 및 관광 산업으로 인한 가치 최소 1조 8천억 원에서 최대 2조 9천억 원으로 총 11조 원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동시에 약 21만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준웅 교수는 “그동안

안 지상파 UHD 도입의 경제적 가치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TV 수상기, 방송 장비, 방송 서비스 등 생산자 가치는 물론 이용자 잉여의 사적 가치를 추정해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중간보고서에 사용된 방법론과 자료를 보완해서 오는 12월 최종보고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산자 가치 중 직접 효과는 UHD 방송 산업과 관련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간접 효과는 UHD 방송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줘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UHD 장비, UHD TV, 지상파 서비스, 기타 방송 서비스, 영상 제작, 광고 등의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분석했다.

강민정 mj kang@kobeta.com

KBS, 개도국에 방송 장비 무상 지원

KBS가 개발도상국의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 장비 지원에 나섰다.

KBS는 11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김석두 KBS 기술본부장, 이재홍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방송 장비 무상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개발도상국 방송 환경 개선 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방통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미디어, 양방향 서비스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 장비와 장비 운용 교육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KBS가 이번에 지원하는 방송 장비는 방송용 카메라와 VCR 등 약 38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반해상도(SD)급 디지털 방송 장비 104점이다.

KBS가 지원하는 104점의 방송 장비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이하 ABU)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준비 중인 사모아, 온두라스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KBS는 방송 장비뿐 아니라 방송 기술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차세대 방송 기술 및 장비 운용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KBS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도 ABU 회원사 7개국 7개 방송사에 중계차 6대와 개별 장비 20점을 지원한 뒤 이에 따른 장비 운용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KBS는 “이번 지원을 통해 ABU 회장사로써 다시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송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교류 활성화를 돕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지역도 UHD 방송 볼 수 있어야”

지역 방송사들, 정부의 지역 차별 정책에 날선 비판

지역 방송사들이 정부가 차별적인 지역 방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역 방송사들은 특히 미래부가 추진 중인 700MHz 정책이 지역 차별적이라며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이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18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는 11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700MHz 주파수 정책은 지역 UHD 방송을 포기한 정책으로 헌법 정신조차 위배한 차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분배 안을 발표하면서 구 방통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바일 공개토 플랜을 반영했으나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상파 UHD 방송의 중요성을 지적하자 모바일 공개토 플랜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래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UHD 정책이 전국 방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려면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최소 54MHz 폭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래부는 이보다 더 적은 양의 주파수 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조 미래부 전 파정책국장은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지에 따라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과 방송, 통신용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방송 권역에 따른 지상파 UHD 방송을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폭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으로 분배하겠다는 미래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느 곳은 UHD 방송을 볼 수 있고, 어느 곳은 볼 수 없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방송사들은 이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 재송신 분쟁 조정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시키는 유료 방송 편향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정당한 재송신료 요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유료 방송 사업자만 위한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지역 방송사의 공익적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사들은 방통통신발전기금을 내온 반면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면제를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광고총량제와 중간 광고 도입 등 적극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통위, MBC 개입 근거 충분”

최민희 의원, “MBC 사태에 방통위 관여할 수 있어” … 재허가 권고사항 제시

방통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MBC 교양제작국 폐지 인사 발령 등과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가 MBC 문제에 개입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MBC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방통위는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며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크게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두 가지인데 둘 다 다음 재허가 심사에서 이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이기에 방통위는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MBC 사측은 미디어 융·복합 등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직원 130여 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와 회사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던 PD와 기자들이 집중 포격을 당했다. 2005년 <PD수첩>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다뤘던 한학수 교양제작국 PD는 사업 부서인 신사육개발센터로, <PD수첩> 팀장이었고 다큐멘터리 <안중근>으로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던

김환균 PD 역시 사업 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대다수의 PD들이 제작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교육 발령을 받은 PD와 기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사측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과 PD들을 속아 내고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밀실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며 “‘배제’와 ‘탄압’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MBC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권고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방통위가 MBC 사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최 의원은 “현재 MBC 사측의 일방적인 교양제작국 해체와 인사발령으로 인해 MBC 조직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노사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2012년 파업 때처럼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다면 MBC 사태에 얼

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재허가 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당시 MBC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과 ‘편성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항목,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 항목, ‘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 등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 실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고, 이 같은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약속했는데 이번 교양제작국 해체로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MBC 사측이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PD들을 비제작 부서 등으로 인사 발령을 내임으로써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조만간 MBC 사태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방통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방통위의 개입으로 MBC의 공영성이 회복될지 여부에 더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무료 VS 7만원” 어떤 게 이득일까?

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권리와 마찬가지로 “원래 놀이터(보편적 권리)로 정해졌던 터에 약간의 공터가 10평 정도 생겼다. 그런데 어느날 부녀회장(미래부)이 놀이터 공터가 그냥 노는 땅이니 이 공간에 상가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왔다. 주민들은 놀이터가 좁아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녀회장은 상가 점주들의 요청대로 상가를 들이기로 계획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에 사고가 생겼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화재 피해가 컸던 것이다. 위급상황 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주민들은 주차장 공간은 상업시설 쪽에도 있으니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녀회장이 공터에 공사를 하겠다며 공터 한 가운데 팻말을 박고는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LTE 방식의 타당성 여부다. 이 연구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11년 동안 기술 방식의 타당성을 연구해왔는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망 구축 작업이 급진전되는 모양새”라며 “재난망은 국제 표준에 입각해서 구축해야 하는데 국제 표준을 따르려면 2017년까지 단말기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도 주파수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재난망과 관련된

국제 표준은 빨라도 올해 말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확보까지는 몇 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700MHz 대역을 고집할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서두른 것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수석부회장 역시 “재난망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바일 공개토 플랜에 근거한 재난망 주파수를 배치한 것은 지상파 UHD 방송 주파수 요구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결국은 통신에 40MHz 폭을 경매할 목적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7만 원 내고 무한요금제를 써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무료로 (TV로) UHD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쉽게 생기진 않는다”며 700MHz 논의를 본래의 궤도에 올리려면 시청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아리랑국제방송에도 낙하산 투하?

후보자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송중길 선임이사가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 접수를 받았고, 11월 24일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장 공모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광고회사 출신인 박모씨가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낙하산 인사 사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원칙 없는 낙하산들의 방송사 경영진 자리 나눠주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방송계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은 사장이 자주 바뀌는 곳으로 유명하다. 정권 교체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장이

교체되곤 했다. 노조 역시 “아리랑국제방송은 2014년 한 해에만 3~4개월 간격으로 4명의 사장을 맞이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어떤 공공기관과 방송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어 신임 사장 공모 과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아리랑국제방송 구성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자를 최종 후보자로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임명권을 가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만큼 박모씨를 신임 사장으로 최종 지명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 쟁점

700MHz 주파수, ‘방송 VS 통신’ 공방 팽팽

700MHz 주파수 중 20MHz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우선 배정키로 결정한 가운데 나머지 잔여 폭의 활용 여부를 두고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전국 방송으로 시청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재난망,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정해야”

11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단말 장비의 적기 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결정하고자 한다”며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 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국장은 “이 중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단말 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려와 달리) 정부 안으로 진행해도 다른 대안과 같은 수준의 지상파 UHD 방송 도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방송 업계와 의원들은

미래부가 제시한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망이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세계적인 조화를 고려한다면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의 위치도 미국과 동일해야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단말기 보급이 용이하고, 미국보다 먼저 전국망을 갖추면 단말 기술 수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정부 안이 아닌 대안1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 국장은 “대안1은 일본과의 전파 혼신으로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대안2와 대안3은 국제적 표준과 달라 장비 단말기의 적기 경제적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대안1의 경우 이미 일본과 양국이 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파수 혼신 해소 방안을 협의한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재난망 분배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UHD,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제공돼야”

이날 정부는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내 상황에 맞는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미래부와 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안으로 지상파 UHD 정책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UHD가 빠르게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료 매체 중심의 UHD 방송으로는 UHD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료 방송의 UHD 상용화가 완료됐지만 케이블과 위성, IPTV의 UHD 콘텐츠 보급이 원활치 않아 하루에도 수차례 재방, 삼방을 하고 있다. 국내 UHD 콘텐츠 부족으로 해외 UHD 콘텐츠 수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러다가 타이완처럼 문화주권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며 지상파 UHD 방송이 상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방송 콘텐츠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 실시로 UHD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UHD 방송은 돈을 내고만 봐야 하는 프리미엄 방송이 아니라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누구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지상파 UHD 방송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의견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함을 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역 차별 없는 지상파 UHD 방송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로 지상파 UHD 방송이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주파수를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 상

반기 중으로 방송용 주파수를 분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청자들이 지상파 UHD 방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조화 고려해 이동통신 할당해야”

또 다른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기존 이동통신 대역이 트래픽 폭증으로 포화됨에 따라 글로벌 핵심 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익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면에서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홍 교수는 “현재 광개토 플랜에 제시돼 있는 다른 대역은 회수 재배치, 생태계 미형성 등으로 당장 공급이 어렵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주파수는 1.8GHz, 2.6GHz 이외에는 700MHz 주파수가 유일하다”면서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는 2015년 경매 예정인 1.8GHz 30MHz폭, 2.1GHz 69MHz폭, 2.5GHz 40MHz폭, 2.6GHz 40MHz 20MHz폭이 있고, 2018년 경매 예정인 2.0GHz 40MHz폭, 2.3GHz 30MHz폭 40MHz폭, 3.5GHz 160MHz폭 중 일부 등이 있

어 최소 300MHz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국제적 조화가 가능한 이동통신 주파수는 1.8GHz 대역(74%)과 2.6GHz 대역(50%)이고 해외 이동통신 전문가들 중에서 700MHz 주파수가 이동통신 로밍 주파수로 사용될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 700MHz 대역으로 국제적 통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한 바 있어 700MHz 주파수 이동통신 할당 주장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조 국장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700MHz 주파수를 어느 쪽에 분배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방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700MHz 주파수 분배를 둘러싼 논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의원, 조해진 의원, 심학봉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상호 의원,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 미방위 의원들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UHD ‘전국 방송’, 두 가지 의미?

“700MHz 내 54MHz 폭 아니어도 전국 방송 가능” 억지주장

전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가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며 “하나는 전국적으로 시청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방송사가 주장하는 전국 모든 방송국의 완전 디지털 전환으로 갈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필요한 11개 채널 가운데 최소 9개 채널을 운영하려면 700MHz 주파수 대역 내 54MHz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 지상파 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됐다. 동시에 이 해석대로라면 700MHz 주파수 대역 내 54MHz 폭을 확보하지 않고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주파수의 공공성 활용 차원에서 재난망 용도의 20MHz 주파수

폭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국장은) 700MHz 대역 내의 일부 주파수를 이용해 수도권외 방송 신호를 전국에 송출하는 것이 전국 방송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방송사의 방송권을 무너뜨리고 지방자치와 역행해 지방 방송 역제를 초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조 국장 주장대로 단지 ‘시청이 가능한’ 방송이라 하면) 중앙의 방송사 본사가 UHD 제작한 뉴스를 보다가 UHD 제작을 할 수 없는 지방 방송사 뉴스로 넘어갔을 때 UHD보다 흐릿한 화면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고 되물으며 “화질이 떨어지면 시

청률 내려가고 시청률이 내려가면 광고가 안 붙어 지방 방송은 문 닫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 방송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역 방송사가 받아서 자사 마크 없이 내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방도 포함MBC도, 광주MBC도 지역 방송들도 다 자기 이름을 달고 자체 UHD 방송을 제작하고, 중앙의 콘텐츠를 받더라도 자사 이름을 단 UHD 방송을 송출하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두 가지일 수 없다”고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조 국장은 공청회 내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언급을 반복하다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는) 아직 특정 안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정한 게 없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주파수 vs 기술표준, 답이 먼저? 알이 먼저?

이상운 교수, “한국 UHD 사실상 국제표준 획득”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한 논쟁 중 지상파 UHD 방송을 실현하려면 주파수 배분이 먼저인지, 기술표준 제정이 먼저인지 때 아닌 의문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700MHz 주파수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면서 “이런 (이례적인) 정책을 펼칠 거면 기술적 타당성이나 표준 등이 확실해야 가능한데, 일본이 2018년 8K의 높은 기술로 UHD를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700MHz를 활용해 그보다 낮은 4K로 전국망을 깔겠다는 건 성급한 일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현재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이 2015부터 8K UHD를 위성으로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UHD 관련 기술 표준에 있어서는 미국이 2015년 연말 지상파 UHD 및 이동HD가 가능한 새로운 표준 제정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29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UHD TV 방송 송수신 정합 안전을 반쪽짜리 ‘잠정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의견전술에 나선 이상운 남서울

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UHD 국제표준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지난 7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77회 DVB(유럽표준화단체) 표준총회에서 우리가 실행 방송으로 검증한 방식이 1단계 UHD 표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제표준이 결정된 것으로, 국내에서 4K로 지상파방송을 시작하고 나중에 8K가 가능해지면 추가로 8K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정은 8K UHD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기본적 표준이라 함은 몇 나라가 따라오는지, 전 세계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지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식이 정해지는 걸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나라가 UHD 세계 1등인데, 그러면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치고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가 따라온다면야 가장 좋다”면서 “하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뜨거운 감자’ 700MHz, 새로운 돌파구 찾나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를 놓고 방송사와 통신사 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새로운 해법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재난망 할당 이후 남은 700MHz 주파수 유휴 대역을 시급을 요하는 방송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2021년 이후 다시 통신용으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의 지상파 디지털 TV(DTV)를 종료하는 2021년은 공교롭게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전국 방송을 완료하기로 계획한 시점

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면 지금의 700MHz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우선 배분한 뒤 2021년 이후 DTV가 빠지는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용을 재배치하고, 이때 유휴 대역으로 남은 700MHz 주파수 대역을 다시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700MHz 주파수 대역은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DTV로 전환하면서 남은 유휴 대역으로, 이중 740~752MHz 대역은 현재도 무선마이크가 사용되고 있지만 출

력이 적어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도 방송을 보는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통신이 요구하는 40MHz를 할당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상파방송이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지상파 UHD TV 방송 전환은 향후 3~4년 이후에 수도권, 향후 7~8년 이후에 전국까지 가능해진다는 예측이다. 전국이 UHD 방송으로 완전 전환되는 2021년께면 DTV 방송 종료로 주파수 대역(470~698MHz)이 남게 되고, 바로 이 시점에 700MHz 주파수 대역에 우선 배분했던 UHD TV를

DTV 주파수 유휴 대역(470~698MHz)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최 의원의 의견에 대해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일단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700MHz 주파수 무선마이크 대역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향 링크 기준이며, 하향 링크는 바로 배분돼야 한다”면서 “2021년까지 통신 트래픽이 안 올라간다면 가능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역시 “상당히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광개토 플랜상으로도 무선마

이크 대역 때문에 통신용 사용이 온전히 안아 어차피 2020년까지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쓰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이 내년에 700MHz의 DTV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결정해도 현재는 DTV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환에 시간이 걸려 2022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최 의원의 안에 제시된) 우리가 2021년께 700MHz를 지상파 UHD에서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시기와도 비슷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ITU 전권회의 폐막 … 19일간 대장정 마무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월 7일 폐막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7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하마돈 뚜레 ITU 사무총장과 자오허우린 차기 사무총장, 민원기 전권회의 의장, 각국 대표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진행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ITU 설립 15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전권회의를 개최한 것은 더 없이 큰 영광”이라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ICT 발전을 위해 ITU와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마돈 뚜레 ITU 사무총장은 “ITU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1998년 이후 전권회의를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즐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ICT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한국은 ‘ICT 올림픽’인 전권회의의 개최지로서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폐회식에 앞서 열린 2015년 ITU 이사회 임시회에서는 민원기 전권회의 의장이 2015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돼 내년 이사회도 주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

의장은 한국인 중 처음으로 ITU 전권회의의 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이끌게 됐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장 차관급 140여 명을 포함해 정부 대표단 3,000여 명이 참석한 ITU 전권회의는 지난 10월 20일 개막 이후 본회의와 분과회의, 특별작업반 회의 등 총 80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글로벌 ICT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막 전 목표로 삼았던 △표준화총국장 배출 △7연속 이사국 연임 △3대 핵심의제 결의 채택을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10월 24일 진행된 표준화총국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ITU 5대 고위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 표준화총국장 당선자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4년간 ITU 표준화총국장직을 수행하고, 본인이 원하면 1차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표준화 총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표준화총국장 당선과 동시에 ITU 이사국 선거에서 7회 연속 이사국 진출에 성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정책을 주도하고, ICT 산업 영향

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한 3대 핵심의제인 ‘사물인터넷(IoT) 촉진’, ‘ICT 애플리케이션 확산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커넥트 2020’이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모두 본회의 결의로 채택됐다. IoT 촉진 의제는 차세대 ICT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IoT에 대한 인식 제고와 IoT 산업 발전을 위한 ITU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고, ICT 애플리케이션 확산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의제는 당초 정부가 ‘ICT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의제로 긴급 상황에서 조기경보, 기후변화 환경보호, 전자의료 부문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14개국이 공동 발의한 커넥트 2020은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 협력 등 4가지 가치 아래 모든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ICT로 연결된 정보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제는 지난 10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ICT 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50개국 ICT 수장이 발표한 ‘부산 선언문’에 포함됐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내년 미래부 예산에서 700MHz 경매 세입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700MHz 주파수 경매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700MHz 주파수 경매 세입 예산이 빠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0월 3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입 부분에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해 얻는 2,080억 원을 포함시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염두에 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모바

일 광개토 플랜은 수정 가능하며(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뭐라고 하던지 여론에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던지 상관없이 미래부는 미래부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앞뒤 다른 미래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결국 미래부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결에 따라 2015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IoT·3D프린팅·빅데이터, 미래 제조업 혁신 주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KISDI 글로벌 콘퍼런스 2014-ICT Convergence and Industrial Innovation’이 지난 11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을 통한 ICT와 제조업 융합에 초점을 맞춰 생산·고용 등 국가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ICT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ICT와 제조업 융합을 위한 국제경쟁력 확인 및 국제 기술수준 공유 등을 위한 세계 최정상 전문가들이 참가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ICT 전문가들은 모든 사물을 ICT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IoT 시대 도래에 발맞춰 ICT를 통한 혁신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에까지 접목해 생산성을 올리고 부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피터 앤드류 마쉬(Peter Andrew Marsh) 전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편집장은 “IoT로 인

해 제조업자들은 더 효율적인 제품 관리 및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디자인이나 제조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면 그동안 해당 산업을 지배해온 주요 공급업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준형 상품들을 개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맞춤형화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는 첨단로봇, 3D프린팅 시스템, 개인의료장비 및 지능형 센서들을 포함한 신형 장비들에 의해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션 ‘ICT 활용을 통한 산업 혁신’ 발표자인 김희수 KТ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IoT가 거의 모든 물리적 사물에 오감파 지능을 부여하고 인터넷에 연결해 비트(bit)가 원자(atom)와 결합되는 제2차 정보혁명 및 3차 산업혁명을 유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보가 기존의 상품가치를 능가하면서 모든 업종의 성격이 정보·서비스업으로 변모되고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경영능력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OBS 고사 방치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위기에 처한 OBS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OBS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자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독립방송 OBS 고사(枯死) 방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OBS 공대위는 11월 5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권부터 정부는 OBS에 갖은 차별 정책을 펼쳐오면서 종합편성채널에만 각종 특혜를 제공해 결국은 OBS의 고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심각한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지고 있는 OBS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OBS는 현행 광고 미디어렐 체제 이전 평균 50% 안팎의 광고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미디어렐 체제 도입 이후 방송

광고 결합판매율 고시를 적용받으며 오히려 -2.5% 성장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OBS의 제작 환경이 악화되는 동시에 경인지역 시청권 발현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국 유일 100% 독립편성 방송국인 OBS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OBS의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OBS의 정상화를 위해 ‘신생방송사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OBS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비율을 5.3%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OBS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별 jnb1001@kobeta.com

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 금지 대상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은 KBS △청진기·쌍둥이 자매의 승마 도전기 △사랑의 가족-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 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플라톤의 노래 높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등 총 4개의 프로그램, MBC △바람의 말(12부) 총 2개의 프로그램, EBS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 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등 총 3개의 프로그램, MBN △말 달리기 등이다. 이들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한국마사회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작비와 촬영 장소 등을 지원받고 협찬주로 고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이날 방통위가 부과한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KBS 5,400만 원(4회), MBC 2,600만 원(2회), EBS 2,700만 원(3회), MBN 900만 원(1회)이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재난방송, 인력·조직 바꾸려면 공적 자원 필요”

‘재난방송 제도 개선’ 골자 공개

재난방송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방송사의 재난보도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적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재난방송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현직 언론직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직 기자 출신인 김사승 숭실대학교 교수는 “재난방송의 원칙과 제도적 방침이 필요하지만 매뉴얼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조금만 손을 보면 된다”면서 “문제는 매뉴얼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취재 역량을 갖추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인력·조직 구조 등 재난 단계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자원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성원 YTN 편성제작국 차장 역시 “재난전문기자 등 인재육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과 비용적 이유 때문”이라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부담을 각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부여할 게 아니라 정부와 언론사가 나눠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들을 법·제도적 차원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으로 재난방송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송사 간 취재경쟁과 미흡한 준칙 준수 등이 오보, 선정적 보도, 사생활 침해, 일률적·반복적 보도 등의 문제를 낳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주관방송사인 KBS가 타 방송사와의 전문성·차별성이 없는 점,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오보나 선정적 보도를 신속한 회의 개최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확립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재난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재난방송의 개시 명확화 △채널 특성 또는 방송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재난방송 준칙 정비 △재난방송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나치게 방송사 규제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재난방송매뉴얼 비치·교육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예산, 모의훈련 보고 등 책임 규정은 디테일한 반면 재난정보의 요청 등 관한 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엄경철 KBS 과학재난팀 팀장은 “KBS가 재난방송을 잘못해 피해자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심의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사후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의 모까지 법으로 제재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방송 시 속보경쟁 과열을 피하기 위해 방송사가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기본적 전제 이외에 정부가 재난정보를 더 빨리 오픈해 부정확한 속보경쟁을 미연에 막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기상·자연재난 정보는 자동적으로 공개되지만 세월호와 같이 사회재난이 터졌을 때는 정부의 잘잘못의 영역이 얹히면서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라디오 규제, TV와 분리돼야”

라디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TV와 다른 별도의 라디오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7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안창현 동경대 박사는 “라디오는 미디어 특성상 TV와 다른데도 한국에서는 지상파 TV로 묶여 재허가, 편성, 광고 등에서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며 라디오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미디어 시장을 지상파 TV와 지상파 라디오, 일간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미디어 규제 틀에서 TV와 라디오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라디오는 TV 안에 포함돼 있다.

안 박사는 특히 광고 제도를 지적하며

“라디오 방송의 주요 수익은 광고인데 지상파 TV와 비슷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2011년 이후 광고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광고를 주수익원으로 하는 라디오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라디오에서 불가능한 자막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등을 TV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상 라디오에서 가능한 광고 유형은 TV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주재원 동의대 교수 역시 안 박사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라디오 방송의 광고는 오디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TV나 인터넷, 신문과 같은 매체의 광고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다”고 말한 뒤 영국의 RAB(Radio Advertising Bureau) 사례를 제시했다.

라디오만을 위한 별도의 진흥기구인 RAB는 영국의 민영 라디오 방송사들

이 라디오 광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한 기관으로 마케팅 활동과 청취율 조사,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 교수는 “RAB가 설립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라디오 방송의 광고비는 4배 정도 증가했다”면서 라디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라디오 광고 규제가 TV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 교수는 라디오가 공적 성격을 지닌 만큼 대안적 미디어로서 라디오 진흥 정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라디오는 시각장애인, 노인 계층 및 운전자 등 제한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미디어”라면서 라디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규제 완화와 콘텐츠 개발 노력 등이 잘 어우러진다면 라디오 산업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재송신’ 갑론을박을 쫓다

‘프로그램 질 담보’가 상생의 열쇠

“직접수신 · 광고수익 기여” vs “저작권 침해”

콘텐츠 좋아야 ‘지상파 · 유료 방송’ 함께 살아

방통위 분쟁조정 개입...‘행정 · 사법 분리’ 역행

올 연말 지상파 재송신료 계약 만료 시점이 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지루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동안의 양상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해까지 유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 협상을 공동으로 하되 계약을 사별로 맺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공동협상과 공동계약을 내세우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료(현재 유료 방송 가입자당 28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게다가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 갈등 문제가 ‘2014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간 분쟁을 직권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1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키는 어디에 있는지 짚어본다.



‘재송신료’ 논란의 핵심
지상파방송과 유료 방송 간 재송신 분쟁은 2007년 IPTV의 지상파 재송신 논란에서 시작돼 케이블 TV·KT스카이라이프 등으로 옮겨갔다. 이후 케이블 TV와의 재송신료(CPS) 협상이 결렬되면서 2009년 9월에 법정 소송이 제기됐고, 2011년에는 유래 없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표 참조). 재송신 분쟁에 있어 지상파방송 업계의 주장은 “유료 방송의 지상파 무단 재송신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료 방송 업계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

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 방송법이 KBS1 TV, EBS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지정해 이들 채널의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 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재송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한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유료 방송 업계의 주장은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 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입 증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송신료 지급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을 목적으로 유선 방송이 보급된 이후 중계 유선을 흡수 통합한 케이블TV를 중심으로 난시청을 해소해 왔고, 현재 지상파 직접 수신율은 6.8%(방통위, 201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보고서)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양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지상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료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정말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인지, 또 유료 방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유료 방송이 지상파 직접 수신율과 광고수익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관건이 되는 셈이다.

유료 방송이 지상파방송에 기여하는가?

일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엔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 대해 2010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이 답을 대신한다. 당시 재판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에 비춰 난시청 해소 같은 시청 보조 역할을 넘어선 독자적인 방송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을 통한 부당이득은 여러 대목에서 목격된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이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용을 들여 개편을 단행하지만 유료 방송은 앉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사 이익을 위해 유리한 채널에 편성하거나 탈락시킨다”면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가입자 수신료의 25%를 지불하면서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만 의무 재송신 채널이 아님에도 일제히 공공채널로 우기며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배짱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료 방송은 수익을 위해 프로그램의 인기 정도에 따라 수시로 채널 배치를 변경하는가 하면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TV홈쇼핑 6개사 채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연간 1조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을 다시 ‘아날로그 방송’으로 컨버팅 전환해 저가의 상품구성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중 아날로그 방송의 저가상품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개 지상파방송의 낮은 직접 수신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료 방송의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이 누려야 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유료 방송사가 저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진 유료 방송 가입자 1,900만 명의 지상파 커버리지가 직접 수신율 6.8%에 머물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료 책정의

원천이 돼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입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료 방송이 펼쳐온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지상파방송 광고료 책정에 적용되는 커버리지는 TV 시청률이나 시청자 수가 아닌 송신소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3사를 합친 커버리지는 가시청 가구 비율 90%를 웃돌고 있으며, 유료 방송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한다 해도 직접 수신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든 논의의 시작과 끝, ‘콘텐츠’

기본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논쟁에서 지상파방송이 ‘사업자 간 원칙’을 정면에 내세우는 반면 유료 방송이 ‘시청자 입장 반박’에 그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청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 그만큼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원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료 방송이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지상파방송 업계가 유료 방송 업계에 대응하는 가장 주된 논리는 다른 아닌 ‘자유시장 원리’다. 시청자로부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평가 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가 주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유료 채널 몇 개 이외 지상파 채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280원의 재송신료마저도 짊어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지상파방송 의존율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는 언급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청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은 이중성이고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시청률 점유율을 보면 유료 방송에 비해 지상파방송이 월등히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송 채널에서 KBS, MBC, SBS, EBS 지상파가 차지하는 시청 점유율은 51%, 종합편성채널이 12.4%, 일반PP가 30.3%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이는 IPTV,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업체가 차례로 지상파방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재송신료 지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5년 지상파가 가입자당 일정 부분의 현금 재송신료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돼 한때 유료 방송업계의 반발로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유료 방송사의 현금 CPS 지급 관행이 정착됐다. 얼마 전에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행을 감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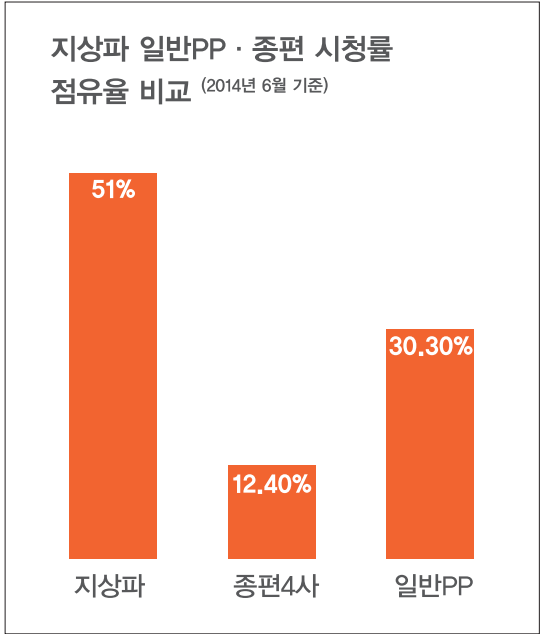
다수 매체가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제기하며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를 원점에서 짚고 있는 것과 달리 2010년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사실상 우리나라 유료 방송업계는 CPS 지불 불가 의사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다만 기존의 논쟁은 CPS 액수에 대한 이전차로 옮겨와, 현재 유료 방송업계는 지상파방송업계가 요구하는 CPS 인상에 반대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적절한 CPS 액수를 과연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시청 점유율이나 시청률이 매년 동일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이 유료 방송사 가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이와 관련해 방송 관련 한 전문가는 “CPS 책정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제작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지상파방송은 물론 유료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따라서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시작은 바로 ‘콘텐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2008년 책정된 CPS 280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그 세부적 협상과 분쟁에 방통위가 개입한다는 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를 역행하는 일인 만큼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사업자 당사자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 협상 일지	
2007년	PTV 지상파 재송신 논란 제기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4월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
	6월 지상파, 케이블 재송신 저작권 침해 관련 의법 조치 통고
	9월 지상파,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케이블 결의문 채택 발표(SO, PP)
	지상파(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입장 발표
	케이블 SO협의회, 광고 및 재송신 중단 발표(10월 1일부터)
	방통위 중재로 양측 상호비방이나 실력 행사 자제 발표
10월	방통위, 제도 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송출 중단
	MBC-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6월	S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11월	케이블 “협상결렬 시 24일 낮 1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신호 송출 중단”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케이블,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 중단
12월	방통위, 협상 재개 공식화
	케이블, SBS 채널 번호 변경 신청서 방통위 제출
	지상파, 간접 강제금 집행 시작
2012년	1월 케이블 “KBS2 송출 중단”
2013년	지상파-케이블 · 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2014년	11월 방통위, 직권조정 골자 방송법 개정안 의결





사물인터넷 한자리에 모였다

사물인터넷 전시회,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려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4 사물인터넷 전시회'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IoT는 전 세계 ICT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플랫폼 중 하나다.

얼마 전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해 2,000억 달러 규모였던 IoT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SK텔레콤과 KT, 시스코 등 국내외 130여 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IoT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인텔리전트 IoT 서비스 △IoT 단말용 경량 운영체제 △생체신호 센싱 디바이스 △고신뢰 센서 네트워크 전송기술 △극면형상 부착 초박형 RFID 금속태그 기술 등 총 11개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개인 생활 맞춤형 IoT 서비스'와 실시간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생을 고려한 '웰라

이프 수면 관리 및 스마트 클린 커피 자판기' 기술 등은 현재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또 ETRI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다산네트웍스는 상용화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핸디피아'와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기술을 전시했다.

SK텔레콤은 디바이스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총 60여 종의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센서나 생활 및 산업용 기기의 IoT 연결을 지원하는 외장형 모듈과 LTE 라우터를 포함한 IoT 기기 30여 종을 선보였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IoT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방형 플랫폼 '모비우스'와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등을 내놓았다.

이에 맞선 KT는 '기가 빌리지(GiGA village)' 콘셉트의 전시관에서 사물지능통신(M2M)과 근거리 무선 통신(NFC), 비콘(Beacon) 등의 IoT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세이프홈(Safe Home) 존에서는 독거노인의 댁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와 휴대용 소변 분석기에 통신 모듈을 접목해 간편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약 서비스를 선보이며 노령화 시대 IoT의 역할을 제시했다.

한편 전시회와 동시에 진행된 '2014 사물인터넷 국제 콘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한 유성완 미래부 과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IoT 시장 규모가 2020년에 1조 달러에 이르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연평균 32.8% 성장하며 지난해 2조 3,000억 원이었던 IoT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7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아직은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유 과장은 이어 "다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수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보안 위협 요소가 내재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IoT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보안과 프라이버시, 윤리 등을 고려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안 관련 문제는 IoT 산업이 성장하면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현재 정부도 IoT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보호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IoT 제품 및 기획 단계부터 보안 기능 및 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 △IoT 제품에 내재되는 보안 임베디드 OS 등 보안 기술 개발 확대 △IoT 보안 기술 문제 해결 전문가 및 IoT 정보 보호 코디네이터 양성 △스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 등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4 코사운드 개최



2014 국제음향 무대 조명 영상산업전(Korea Audio Stage Equipment Lighting Visual Fair, 이하 코사운드)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교회 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KOCAD 2014 대한

민국 교회 건축 디자인 박람회'와 전문 밴드의 공연과 악기 할인 판매가 진행되는 'MUSIC FAIR 2014 대한민국 뮤직&악기페어'도 함께 열렸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등정



체육대회 2014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가 10월 25일 토요일 북한산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북한산 등반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개그콘서트 간판 개그맨 김수영 진행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졌으며 각 방송사별 족구대회와 다트대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족구대회에서는 치열한 격전 끝에 CBS 방송기술인협회가 KBS 방송기술인협회를 제치고 우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다트대회에서는 KBS 방송기술인협회가 우승을, SBS 방송기술인협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교육 방송기술교육원은 10월 21일 화요일 광주 MBC 대회의실에서 지상파 방송사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디지털 방송 기술 세미나(광주)-미래 방송의 트렌드를 보다'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지상파 UHD 방송 진행 경과 △소셜 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융합 등 환경 변화 △사례로 살펴보는 빅데이터 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디지털 방송 기술 세미나]

“미래 방송의 트렌드를 보다”

교육목적

- 지역 방송 기술인의 기술 및 정책적 직무 능력 향상 도모
- 차세대 방송 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우수 방송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14.11.24.(월) 13:00~18:00
- 교육대상 : 지상파 방송사 기술인 30명(타 직종 수강 가능)
- 교육장소 : KBS청주 8층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접수방법

- 교육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 (별도 사전접수 없음)

기 타

- 교육비 : 무료 (교육생 출장비 및 기타 숙식비는 각자 자체부담)
- 담당자 : 민서진 연구원
- 문의사항 : 사무실 02-3219-5640~1
- E-mail : bea@kobeta.com

교육 커리큘럼

시간	단위	강사	교육내용
13:00~13:30	0.5	방송기술교육원	인사말 방송기술교육원장 김일양 교육안내 교육사업 소개, 교육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3:30~14:50	1.5	LG CNS AA Center 전석진	•세상의 변화 방향 •빅데이터, 실재를 만나다. •빅데이터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방송 빅데이터 사례 •자유논의
14:50~15:00			휴식
15:00~16:20	1.5	EBS, 미래방송연구회 박성환	미디어 환경 변화(소셜미디어 중심) 소셜미디어 시대, 소셜미디어 사용 실태 소셜미디어 혁명(소셜TV) 미디어 융합 주요 소셜미디어 종류, 미디어 융합 흐름 미디어 융합 개념 모델 미디어 융합과 콘텐츠 소셜미디어 사례, 소셜미디어 활용 미디어 융합 시대의 콘텐츠
16:20~16:30			휴식
16:30~17:50	1.5	KBS 기술기획부 조원현	UHD 방송 4K, 8K UHD 소개 및 실험방송 진행경과 700MHz 대역 할당 기타 동향 장면인 자막방송, Loudness 규제
17:50~18:00		방송기술교육원	설문조사 : 설문지 배포 및 작성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합방송법과 OTT 서비스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범용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OTT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방송의 영역이 라고 여겨졌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통신의 산업적, 정책적 체계에 격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Netflix나 Hulu와 같은 미국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임박한 지금, 콘텐츠 유통·거래 시장에 대한 경쟁 상황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OTT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방송을 대체할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당국은 OTT 서비스가 아직 기존 방송 서비스에 위협이 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다만 앞으로 TV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과정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력된 '부가방송서비스사업자'라는 구분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연관 문제로 쉽게 풀리기 힘들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OTT를 방송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이유로 '부가방송서비스'로 따로 통합방송법에서 구분한다면 아프리카TV, 곰TV 뿐 아니라 포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이버 TV 캐스트, 다음 TV팟 등의 지위 또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방송서비스 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현재 케이블,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를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도 별도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즉, 수평 규제체제의 도입을 전제로 방송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방송법에 어떤 용어로든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 중 하나로 '부가방송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수평 규제 체제를 전제로 하여 OTT가 '부가방송서비스' 지위를 얻는다면, 이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가 되며, OTT는 내용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서 위와 같은 규제 체제의 정비 없이 단편적인 '부가방송서비스'나 다른 범주로 포함된다면 기존 방송법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임시처방력의 추가 조항을 넣은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요컨대 국내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조차도 지상파 방송사, IPTV 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히 하고, 유료방송플랫폼의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일 OTT 사업자에 대한 범주화 및 정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방송법보다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Netflix나 Hulu와 같은 미국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임박한 지금, 콘텐츠 유통·거래 시장에 대한 경쟁 상황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사설

700MHz 주파수 논의, 이제 국회가 나서라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활용할 700MHz 주파수 대역 20MHz 폭을 최종 확정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에 향후 700MHz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700MHz 대역 전체 108MHz 폭 중 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 총 20MHz 폭을 재난망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했다. 미래부의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망 주파수를 미래부의 원안대로가 아닌 다른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의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배치를 주문했다. 미래부가 원안이 아닌 대안1로 내놓은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대로 진행했다면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망과 방송용, 통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재난망 방식이 동일한 미국과 주파수 대역이 같아 재난망 기지국이나 단말기 보급이 더 손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결국 원안을 고집했다. 단 한 차례의 공청회 뒤 바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상정했다. 공청회

부터 재난망 주파수 분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에 불과하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미래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분명히 700MHz 주파수 정책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미래부가 제시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주파수 배치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밀고 나갔다. 말 그대로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당초 계획대로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또 다시 입장을 바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적용되면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은 커녕 지상파 UHD 방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난망 주파수 대역은 확정됐지만 700MHz 주파수엔 잔여 대역인 88MHz 폭이 남아 있다. 88MHz 폭이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협의체를 믿을 수는 없다. 언제 또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700MHz 잔여 대역 활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주간 이상의	전화 02-3219-5637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안창준, 최권용, 나경록	팩스 02-2647-6813
취재기자 백선하, 객재옥,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트위터 @KOBETA_COM
기획실 강동균	홈페이지 www.kobeta.com
인쇄인 성전&화성프린원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성명서] 국민과 국회 우롱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즉각 취소하라

보편적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700MHz 대역 분배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국회 공청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국무조정실이 11월 14일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를 기습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재난망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국회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한 바 있다. 심지어 11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는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하며 4가지 안 중 여러 사안을 고려해 국회와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부안 통과를 위한 기습적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었다.

결국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와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미래부 뜻대로 하기까지 국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평등한 정보 복지는 애초에 미래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마저 무시하는 대법합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또한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망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주파수 분배 방안에는 신중

을 기해야만 한다. 국내 재난망 통신 방식을 ‘공공안전 롬탐에볼루션(PS-LTE)’으로 결정한 만큼 우리와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게 국내 재난망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 보급을 용이하게 되고 관련 기술 수출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에 따라 미국 주파수 대역과 다른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할당하려 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과 같은 재난망 주파수를 분배하면 일본과의 전파 혼신으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일본과의 협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미래부가 부처 입장만을 생각하여 공공재인 전파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재난망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며 그 진의가 의심되는 미래부의 졸속 재난망 주파수 분배 추진을 경계한다.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미래부의 행태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 미래부가 진정 제대로 된 주파수 정책을 고민한다면 오늘 개최될 예정인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파수 분배안을 재검토한 후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시청자들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4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CONFERENCE KOC 2014

기술 그리고 희망



2014. 11. 19 (수) 10:00 ~ 17:30
KBS 아트홀 (구 라디오공개홀)

주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차세대 방송기술교육원

후원

사전등록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www.kobeta.com) 또는 www.onoffmix.com에 접속 'KOC 2014'로 검색, '참여하기'로 사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연합회 사무국 02-3219-5635~42

교육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발전 기금